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1일 (금)

제 26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3.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4.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북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9일 미 상원의회를 통과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난 3월 미하원에 상정된 이후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이 결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며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시키고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음모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 미국에 대결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응은 미국의 대북 불신과 혐오감을 강화시켜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동당 역시 이 법의 근본 목적이 "북한의 정권교체 및 체제 붕괴"에 있다고 규탄하며,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6자 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노력을 더욱 경색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 의회에 대한 항의서한에서 "실제 북의 인권개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획탈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4년간 매년 24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지원하기로 명시하고 있는 것. 평화네트워크는 기획탈북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반북성향 단체들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와 탈북자 문제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반인도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도 탈북의 근본적 이유를 식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기본적 목적에 동의하면서 각론이나 실현방식만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는 "한미 공조에 지나치게 치우쳐 이 법안의 근본적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크 해방법'처럼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의 제심 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이 입법 수순으로 남아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퍼넛: 양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는 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조 문 해설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현장투쟁 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살아있는 법 길잡이다.

책은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의 유형별로 비정규노동의 확산 양상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아우르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의 최신 경향, 사회적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한다. 260여 일에 이르는 과업으로 2년 이상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했지만 계약기 간 단축으로 투쟁의 결실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린 이랜드노조 사례, 성희롱 사건 피해 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 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왔게 된 대송 택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법'에 불과하 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저자 가운데 하나인 권두섭 변호사의 말처럼, 이 책 은 그야말로 "법이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 온 고난의 기록"인 셈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절망의 현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법 해석을 이끌어낸 승리의 기록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읽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준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궁정적인 판례를 이끌어낸 다음에도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충실히 제안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운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려 깊은 대응, 정규직과의 연 대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희망의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노동자들 의 현장 투쟁에 밀착해 법률적, 조직적 지원을 해 온 경험이 없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 는 것이다.

풍성한 사례와 살아있는 해석이 돋보이지만, 아무래도 법 해설서라는 틀을 뛰어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어려운 법률 개념들을 현장 노동자들의 언어로 풀어내고, 사례 와 관련 법 해석을 알기 쉽게 엮어낸 후속편을 기대해 본다.

<기사 처음으로>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자체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 △불심검문 시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 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육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아무개 씨는 2002년 재학 중이던 학교를 출입하던 중 경찰의 소속, 성명은 물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채 불심검문을 받아야했고, 소위 '원천봉쇄'를 통해 선별 없이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사진 기자인 또 다 른 김아무개 씨는 미대사관 근처에 있는 직장에 다니다 여러 차례 검문을 당했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불심검문 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카메라 소지 이유, 행선지 등의 대답을 강요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원천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에 대해 획일적 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 문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불심검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원천봉쇄'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해왔던 것.

또 경찰 측이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0항을 근거로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는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직무집행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합법행위인 '불심검문 거부' 등을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기사 처음으로>

가입은커녕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연락을 한 쪽은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을 해법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보호법을 소개,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호법은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취급해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자유수집부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행자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단 세 차례 열렸을 뿐이다.

또한 보호법은 실질적인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제를 강화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는 침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면 이 법안에는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불응 등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예방'을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통합 운영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정보화 프로젝트일 경우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2일 (토)

제 26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 루 소 식
하 루 소 식 자 세 히 찾 기
하 루 소 식 주 제 별 찾 기
민 화 사 랑 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2.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3.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축대밭으로 만든 먹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보를 잇고 있다. 미국에게 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제거할, 그들의 명분 쌓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어느 국가나 인권문제가 존재하듯이 북에도 분명 인권을 배신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복인권 개선'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법안이 걸치고 있는 화려한 겉옷에 불과하다. 법안을 추진해온 주체들은 북의 인권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 그 뒷면엔 '미국의 패권주의를 향한 음모'가 새겨져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미국의 개입을 통해 복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탈북단체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그에 대한 물적지원과 시장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 법안은, 북의 시급한 인권현안인 식량권의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북 체제 붕괴"라는 비밀이랄 것도 없는 '숨겨진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말한 대로 "소련이 붕괴했듯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을 법안은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60년에 걸친 중의 세월을 넘어 이제 겨우 시작된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 노력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위해 총을 든다'는 약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씨앗일 뿐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심판대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아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 씨가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전향공작반'의 사주를 받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계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전향 좌익계소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사상전향을 강요했던 것. 의문사위는 "최 씨가 사망 직전, 실어증 등의 병에 걸려 있었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장기투약 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상

태었다"고 전해, 당시 최 씨가 전향공작에 의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의문사위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61년 이래로 좌익재소자들을 각종 처우로부터 제외하고 독거 수용하는 등 국가기관이 사상전향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전향 좌익재소자들을 빈번히 탄압해 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73년 6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 주도 아래 전향공작반은 조 씨와 같은 재소자들을 동원해 '비전향 좌익재소자 없애기'에 나섰다"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이 가해자인 폭행치사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문사위는 검찰이 공소시효제도를 방패삼아 국가범죄를 공개할 의무를 방기해 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씨가 조 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지 이미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조 씨가 저지른 폭행치사죄는 7년이 공소시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은폐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이니 만큼 의문사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엔은 68년 총회에서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하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에관한협약'을 채택하는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최 씨는 49년 3월 경, 월북하여 인민군 소위로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53년 검거되어 무선전신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원로교사 20여 명은 "반공교육이라는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참회 없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없다"며 국보법과 반공교육 폐지를 주장했다.(9.7)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보수 세력들도 '국보법 존치'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고,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자유와민주주의수호를위해비상시국을선언하는사람들'은 국보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세력들은 연일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9.9)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보수언론들이 막연한 안보위협 분위기만 조장해 국보법 간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9.14)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국제엠네스티와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9.16)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은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 "대체입법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9.16) 3대 형법학회 역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9.20) 1750명의 문화예술인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9.22)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과 형법 보완 사이에서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 결정을 추시 이후로 연기하고 당내 국보법 전담팀을 돌연 해체했다.

2. 정부의 파견제 개악에 성년 노동자들

정부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 허용 업무 완전 자유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9.10) 양대노동 비정규노동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입법안 철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9.16) 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총파업'을 벌일 것을 결정한 가운데(9.21)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노동 대표자들은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 후 농성을 마무리했다.(9.22) 또한 열린우리당은 향후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부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9.24)

3. 강의석 학생에게 박수를! 종교의 자유에 환호를!

강의석 학생이 단식을 완강하게 지속하자 강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에베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21) 청소년들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의식이 차한 현실은 학교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청소년 모두의 일"이라며 강의석 학생을 지지했다. 대광고 교사들도 '대광고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학교측에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9.23) 강의석 학생이 단식을 시작한 지 45일만에 학교는 미흡하나마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9.24)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5일 (화)
제 26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 루 소 식
하 루 소 식 자 세 히 찾 기
하 루 소 식 주 제 별 찾 기
만 화 사 랑 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2.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3.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4.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지난 2일 성매매 피해 여성인 박 씨가 성매매 업소의 갈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 씨와 몇 차례 상담을 나눈 적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에 따르면, 박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고액 월급을 미끼로 내건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그녀는 그야말로 '성매매 정글의 노예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흥업소 업주가 진 빚 천만 원의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했다. 더욱이 업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피폐해진 심신을 이끌고 '다시함께센터'를 찾아 상담한 끝에 업소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는 오히려 "아는 경찰한테 손을 써놓았다", "널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움에 떨던 박 씨는 결국 전깃줄에 목을 뒀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성매매 방지법 반대 시위에 나선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포주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시위에 나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데만 열중해왔다. '다시함께센터'는 "일부 언론들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방지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에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주의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 역시 "성매매를 둘러싼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보도는 여성들을 그냥 성매매 업소에 두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박 씨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드러나지 않은 삶에 주목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박 씨의 사례가 일깨우는 바와 같이, 왜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 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조장하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자에겐 한없이 강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약하기만 하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부당 해고 후 행정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겨우 '벌금 몇 푼'으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그네틱스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부당하고 여부를 다뤄 봐 중 62명의 노동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약 22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시그네틱스 노동자들과 같이 장기투쟁을 하다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부당 행위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명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해태·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무조건 노조 탈퇴만을 강요하는 사업주들에게도 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 에이앤오(A&O)는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결국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화, 사업장 통제활동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벌이고 있다. 심지어 고 배달호 씨와 고 김주의 씨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도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전국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2박 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단압 근절 △악질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비정규직과 손배가압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5일 노동관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국회 앞으로 옮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인권은 인류보편의 선(善)을 상징하는 가치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부정적인 권력에 항거할 때, 인권의 깃발을 내세운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횡포에 저항할 때도, 인권은 언제나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정의로운 문덕이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가 지금 비상식의 바다에서 포악한 해석의 공격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2천 4백만 달러 안에서, 총 9천 6백만 달러(약 1천 1백 52억원)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2천만 달러가 탈북자 지원단체 및 개인 지원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작, 역지라도 인권증진의 취지에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야인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는 생색내기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중국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를 '해방'하고, 이란을 '민주화'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미국의 궁극의 목적은 '악의 축'을 제거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수 있는 화근이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인권'은 절대선(善)을 상징하는 보편가치로만 늘 선양되지는 못한다. 독재시대에 미국은 남한정권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면 곧잘 '인권'을 들먹였다. 그건, 내정간섭임에 틀림없었지만,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에게겐 '훌륭한(?) 응원군'이기도 했다. 이제 미국은 인권을 구실로 내정간섭을 넘어서서 북한의 체제붕괴를 기도하려 한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부류가 있다. 반북적 시각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조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소위 '북한민주화운동'을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시비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이다. 하지만, 그들이 보편가치로서의 인권이란 잣대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님은 명약관화하다. 그들에게 인권은 천미 반공주의, 즉 반북주의의 정치적 선전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북한인권법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들 역시 인권을 심히 유린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민족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양날의 칼이 되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천미반공주의자들이 곡해된 '인권' 가치를 무기로 북한을 협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권' 담론을 둘러싼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들에 의해 유린된 인권의 '복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 김정인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원한이여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때 아닌 군가가 서울시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십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도심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군가에 기억의 한 귀퉁이에서 고집어낸 흑백필름 같은 '반공열기대회' 한 장면이 떠올랐다.

4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아래 국민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비상구국기도회에서는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기 회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들의 천국이 되고 공산화된다"며 "목숨 걸고 국보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국보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경제가 어려워 구국기도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이러한 조 회장의 발언에 연신 성조기를 흔들었다.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등장함으로써 시작을 알린 국민대회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비난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은 "국보법이 싫으면 북한으로 넘어가라"고 월북을 '고무·선동'했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인권은 간첩과 불순분자들의 편리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국보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마녀사냥'을 주문했다.

집회에서는 보수언론들의 보수대중 '장단 맞추기'도 빠지지 않았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자유시민저널>을 통해 "차라리 유신으로 돌아가자"고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부추겼고, <월간조선>도 "우리도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선정적인 문구로 '봉기'를 선동했다. 남·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눈 <월간조선>식 '진실의 무기' 선동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들 앞에서 '무기 약탈'을 외치며 화답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진출'이 경찰들로 인해 좌절되자 경찰력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과공작원(HID)'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찰저지선을 교란시켰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듯 했다. 경찰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진짜 사나이'를 연신 부르며 강하게 저항했고, 곳곳에선 "(경찰들) 총으로 다 쏘버려" "노무현 죽여라" 등의 살기동등한 외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전경들도 모두 '주사파'라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는 모습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름과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는 파시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6일 (수)

제 26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2. "삼성이 저지르는 악행 알려야 했다"
3.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4.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휴대폰 불법 복제', '위치추적' 초일류 탄압 자행

삼성SDI(대표이사 김순택)가 4일 오전 노조설립에 따른 탄압과 관련, 자사 노동자가 언론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일방적으로 정문 밖으로 쫓아내 주위의 반격을 사고 있다.

삼성SDI 수원 공장에 재직 중인 강재민 씨는 지난 7월 자신과 동료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동통신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누군가가 강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것이다. 강 씨 등 위치 추적을 당한 9명은 모두 삼성 노조 설립에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강 씨 등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인 위치 추적을 해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의 이권회 회장 등을 고소했다. 삼성은 '무노조 신화'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라는 경악할 일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사측은 고소장을 제출한 현장 노동자 4명에게 갖은 회유와 협박을 가하며 고소 취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회사가 직접 회유와 압력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을 설득해 강 씨 등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라고 괴롭혀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고소인 4명 가운데 3명은 이와 같은 살인적인 회유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현직 삼성직원 중 강 씨만이 유일하게 고소인으로 남게 된 것이다.

강 씨는 지난 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휴대폰으로 감시당해온 사실과 함께 고소취하의 배경에는 사측의 집요한 협박이 있었음을 증언했다. 이 내용이 방송에 보도된 다음날, 강 씨는 출근을 하자마자 회사 간부와 면담을 해야 했다. 회사 간부는 강 씨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니가 사람이나. 회사 안에서 밥도 쳐먹지 말고 똥도 싸지 마라"며 비인간적 언사를 퍼부었고, 오전 11시 반경, 대리급 사원 세 명이 강 씨를 강제로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았다. 강 씨를 향해 "저 새끼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고 경비 직원 앞에서 모욕을 가하기조차 했다.

강 씨는 사측이 이 사건을 오히려 근무지 이탈이라고 뒤집어 씌워 해고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 4일 오후 작업장으로 복귀했다. 5일 출근한 강 씨에게 사측은 또다시 점심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해고노동자 김갑수 씨는 삼성의 탄압의 양상이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도 많이 되어서 이제 관리자가 강재민 씨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동료들로 하여금 왕따 시키는 수단을 쓸 것"이라며 "강 씨 사건뿐 아니라 삼성은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서 각종 '강제'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삼성의 '초일류 탄압'에 대해 비난의 어조를 높였다.

삼성노동자탄압분쇄공대위 노영란 집행위원장은 '휴대폰 복제 및 위치 추적'에 대한 사측의 혐의 부인에 대해 "회사가 아니라면 누가 굳이 노동자들을 위치 추적했겠는가. 그러고도 협박과 회유로 노동자들의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일"이라며 "삼성엔 비인간적인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이번 일에 대해 대국민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삼성이 저지르는 악행 알려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 그대로 강제인 씨(삼성SDI)는 무법지대 '삼성공화국'과 싸우고 있다. 강 씨의 심정을 들어왔다.

◎ 어떤 일들을 겪었나?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었다.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가 시끄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회사의 방식은 장패와 다름없다. "칼질 맞고 싶냐", "목숨이 두 개냐"는 등 일상적으로 협박한다. 내가 울분을 못 참고 주먹다짐이라도 하게 되면 회사는 횡재하는 거다. 나를 폭력 행사로 해직시키고 고소하면 되고, (삼성은)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회사 입장에서 (핸드폰 추적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편한가. 삼성은 원래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에게 1~3명의 사람을 붙여서 관리해 왔다. 그러나 핸드폰을 추적하면 사무실에서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김희와 같은) 비상이 걸리면 덮쳐서 해산시키면 된다. 인사부장은 1년의 총보비가 2백--3백 억씩인데 너 때문에 다 날라갔다고 한다. 이미지 관리에 그렇게 신경쓰면 (휴대폰 복제를) 안 했어야 하는 거다.

◎ 동기가 무엇인가?

이 싸움을 처음에는 삼성이 저지르는 문제들을 공론화 시켜서 그저 혼내준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삼성에 입사했다. 그러나 이제 내 후배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삼성에서는 온갖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고 이대로 2, 3년 진행된다면 삼성의 많은 자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고졸이 입사한다는 건 더욱더 불가능하다.

◎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삼성의 구조조정에는 인권이란 없다.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우니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 달라고 한다.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너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회사에 왜 있냐"는 식으로 인격적 모멸을 준다. 사실 지금 사측에서는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와 관련된 일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착수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생존권 문제가 터지면(구조조정이 시작되면)모두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지난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아무개 씨는 2000년 3월부터 그 해 말까지 다섯 번 격리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격리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6인실 이하)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김 씨는 16일의 입원기간 동안 무려 150여 만원의 부당한 입원료를 내야 했다. 격리병실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부담액이 약 1만2천 원인데 반해 상급 병실은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고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 씨는 변경 전 격리환자 심사 기준에 따라 2년만에 과다징수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병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김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내주면서 불합리한 폭리를 취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 조사 결과, 일반병실(6인실)을 50% 이상 갖추지 못하면 5인실 이하 상급 병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병실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를 그대로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입원 환자 중 전염성이 강한 환자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격리병실에 대한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환자들이 고액의 입원료를 지불해왔다. 격리병실 입원 역시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격리병실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환자를 상급병실에 수용,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 이용료를 받아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병원들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피해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보장해 주고 있다. 기존 심평원 기준은 면역력 저하 등 4가지 경우에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격리 기간도 병세가 '회복'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은 격리실 입원의 경우가 3가지로 축소되고 '반드시' 격리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한다'고 덧붙이고 있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격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격리실 인정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뉘나간 심평원의 격리실 심사기준 변경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지극히 의료기관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앞으로의 항의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국민적인 기준"이라며 "(변경된)격리병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A4(art for) 자유展 - 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

-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실
- ▷ 기간 : 10월4일 ~ 11일
-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 주관 :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 미술인연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및 국가보안법 폐지 피해자 대회

-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 ▷ 시간 : 10월 9일 오후 4시
-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작가대회 및 '보안법과 창작의 자유를 위한 시낭송의 밤'

- ▷ 장소 : 마로니에, 탑골 등
- ▷ 시간 : 10월 9일 오후 5시 30분
(마로니에에서 탑골 공원까지 행진, 시낭송의 밤 진행)
- ▷ 주최 : 민족작가회의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7일 (목)
제 26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2.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3. '안보불안 증폭증에서 깨어나자!'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 37일(6일 현재)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단식투쟁이 목숨을 건 각오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1년 이상 지속해온 수배생활에 이어진 단식 탓인지 5일부터는 간혹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은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현자비정규노조가 '고용보장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집단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73일째. 7월 23일 '공정 직영화'라는 미명 아래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됐다. 이때 안 위원장을 포함한 현자비정규직노조 핵심간부들도 모두 두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를 "노조 핵심간부들을 겨냥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말한다. 정리해고를 당한 후 비정규노조원 11명은 현장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2일, 노동부로부터 현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던 파견노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자비정규노조는 금속연맹,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와 함께 5월 27일 (주)현대자동차 등 21개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노동부에 진정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혼재 △주야교대 작업 △일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하청업체의 계약해지 시 전환배치 및 계속근로 여부를 원청에서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을 사유로 1,8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해, 금속연맹은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하던 기존의 판정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는커녕 '퇴거강행 가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 농성장과 현장 곳곳에 법원의 강제퇴거 고시문이 부착돼 강제퇴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자 울산공장에는 1만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힘든 공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현자비정규노조 조병용 노조원은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 차별이나 비인격적인 대우 등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불법으로 판정된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이 존재하고 '한시하청'에 '파견아르바이트'까지 있다. 갈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는데 두 말할 나위도 없다. '2차 하청'이라고 밝힌 한 노동자는 "정규직은 월급이 인상되면 9만원, 10만원씩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고작 시급 10원 올리려고 발버둥친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에는 최저시급임금에서 10원, 그리고 올해에도 16원이 올랐을 뿐이다.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을 민주노조 운동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인 고비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망이 없다는 위기감이 노동계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 역시 "현자 비정규직 문제는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800만에 달하는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투쟁은 향후 파견법 개정저지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전조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6일 현자 울산 본판 앞에서 진행된 '원·하청 결의대회'에서 신독수 5공장 비정규직 담당 대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해서 안 위원장이 '죽음의 단식'을 끝낼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이 호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듯 했다.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며 통치하려는 자본의 이중 전략에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힘'은 여전히 노동운동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형법학회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반국가단체의 목적규정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 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현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표현의 자유나 인권침해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남적화전'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50여년 넘게 반공교육을 받은 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안보불안감'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하는 법규정을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불가능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기본법은 형법으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안보의 대상이 '적국'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으로 생각을 처벌해온 사상형법"이라고 비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일부 대형교회가 격렬히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명수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독교 원로 인사들은, 6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문제가 당리당락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로 되어온 국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법학회 등 형법전문가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진단을 받아들여 '냉전적 안보 불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나라를 지킨 것처럼 오택되어 왔는데, 이는 군사독재시절부터 인권침해를 야기한 악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내세워 기독교계가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에 대해 동수원교회 박영모 목사는 이는 기독교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소수의 대형교회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 자유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원로들은 가칭 '국가보안법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이후 목요일마다 국가보안법폐지촉구 기도회 등을 열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8일 (금)
제 26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2.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3.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4. 경찰 '부안 상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5.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엉뚱하게 '테러리스트'로 몰며 감시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반한 활동'에는 정치적 주장, 정부시책 비판,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이 사실을 접한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티푸 씨는 불안해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주노동자들은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범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테러리스트 혐의'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을법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출신 레닌 씨는 "형사들이 자주 전화해서 '알 카에다'나 이슬람 노동자들에 대해 묻는다. 차에 태워 하루 종일 끌고 다니거나 술집에 데려가서 '테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협박하곤 하는데 매우 당혹스럽고 괴롭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레닌 씨의 동료들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었다. 심지어 합법 체류자가 경찰에 의해 증거도 없이 '알카에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연행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테러 방지 정책이 결국 테러 음모를 이주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워 강제 추방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이누아르 씨는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씌워 강제추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동성당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을 테러리스트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투쟁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며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맞을 때 때리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의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소장은 "반인권적인 노동착취, 정부의 강제추방, 판판 객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파렴치 행위 등으로 생긴 이른바 '반한 감정'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불법체류자'의 활동을 '반한 활동'으로 규정하며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라고 못박았다.

명동성당 농성단, 민주노총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합동단속과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장은 "국민이 테러리즘에 노출된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 한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국민의 안전은 파병 중단과 월군을 통해서 확보해야지, 이주노동자를 잡는 것은 생사함을 잡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클릭! 인권정보자료

글쓴이: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펴낸이: 한겨레신문사/
253쪽/ 2004년 9월

우리 사회는 '고문'을 군부독재 시기에나 발생했던 '치부' 정도로만 여길 뿐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고문희생자는 세상과 격리된 채 국가차원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가족만의 책임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감옥 및 시설수용자는 관리자의 통제 하에 비인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아동은 여전히 체벌이란 훈육 수단에 방치돼 있다.

고문은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특정 사회적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고문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의 유물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폭력의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고문희생자의 의료·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고문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단행본을 출간해 과거의 유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고문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다.

이 책은 유럽 사회에서 분석한 고문의 실체와 고문 생존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고문방지 및 생존자의 재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고문 실태와 고문생존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장에서는 고문의 정의와 원칙 및 대상, 특성, 고문방법(과정, 기법)을 기술하고 있고 2장에서는 고문의 역사를 소개, 3장에서는 고문생존자들이 겪고있는 신체·심리·경제·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4장에서는 고문방지협약과 고문생존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재활대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한국의 고문실태와 고문피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가혹행위,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강제진압 후 연행자와 구금자에게 가해진 가혹행위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고문 현실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및 재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고문관련 기록을 보는 것은 고문생존자들이 겪은 무섭고도 굴욕적인 고통에 함께 연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음 편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의 기억 속으로 가슴 아픈 동행의 길을 떠나보자.

<기사 처음으로>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주)의 '다윗과 골리앗'과도 같던 투쟁이 집단농성 74일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38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던 안기호 위원장도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단식을 끝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협상을 통해 △농성단 10명 전원을 원직복직하고 △임단투에서 합의한 시급 316원 인상분을 적용하며 △비정규직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직이 합의된 노동자 중 4명이 12일, 나머지 6명도 빠른 시간 내에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석성기 현자비정규직 농성단 의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사회 각계에서 보내준 지지와 연대의 손길들이 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이후 비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현자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제조업 직접공정 구조적으로 합법 도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8월 20일 현자노조에서 진정한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지연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판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직접라인은 모달화하거나 큰 덩어리로 도급화를 시도해 공장 전체가 간접고용 비정규직화될 것"이라며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판정을 뿌리뽑기 위해 비정규직 전문 노동사회단체들과 변호사, 교수,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자동차 완성사, 부품사, 조선, 철강 등 500인 이상 사업장 59개의 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총파업 투쟁을 위해 전체적으로 집행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삼보일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려는 부안 군민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문정현 신부 등 참가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주방 범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가는 3일간의 삼보일배를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부에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청사 후문 앞을 지키고 있던 전투경찰부대(서울 기동대 1001부대)로 인해 150여 명의 삼보일배단이 있기에는 길목이 비좁아 부안군민 몇 명이 도로 1차선을 넘어가자 전투경찰이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갑자기 방패와 헬멧을 휘둘러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정현 신부는 경찰이 내리친 헬멧에 맞아 머리가 찢어졌고, 손광국 씨는 중상을 입어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경찰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에워싸고 있었다"며 "기자회견에 폭력진압으로 악명 높은 1001부대를 투입한 것부터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1001부대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자와 전경 등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정현 신부는 부안으로 가던 중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상태가 악화돼 부안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 16일 산자부 장관의 부지선정 절차 포기선언으로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핵폐기장백지화'에 대한 서류에 서명도 하지 않다가, 지난 3일 2008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따로 세 개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책위는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백지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삼보일배를 다시 시작했다.

<기사 처음으로>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을 경우 16일 만에 수도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정포 1천 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천 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4일 국방부 국정감사)

"일부 교과서가 광복 이후 남한 역사를 친북, 반미, 반재벌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쏟아진 한나라당의 '안보위기와 교과서' 발언은 한나라당의 '2004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색깔공세 전락'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요쟁점사항으로 "헌법 질서·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좌파 활동공간 확대를 뼈대로 한 '자유민주체 훼손'에 문제제기"하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 세력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언론 역시 한문 거들어, 조선, 동아일보는 '친북 교과서 파문'을 연일 대서특필하는가 하면 중앙일보 역시 박진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2급 군사 기밀을 기사화해 관계부처로부터 6개월 동안 취재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국민이 맡긴 '행정부 견제'와 '민

생 쟁기기'라는 고유의 책임은 뒷전에 두고 '색깔론 공세'로 국정감사에서 정략적 이득을 쟁기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7일 영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정부를 잡겠다면서 안보위기를 조장,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내몰고 나라경제를 결단내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 주장은 "교과서의 앞뒤 문맥은 거두절미한 채 일부 내용만을 입맛에 맞게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제시한 33개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보위기가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09일 (토)
제 26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하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들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2.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3.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4.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아?
5. <알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논평> 성매매 피해 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돈 벌 방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갈 곳 없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불꺼진 '업소'를 떠나지 못하고 생계를 찾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접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불꺼진 흥등가에 유폐되어 빛더미에 앉아 생계를 걱정하다가 생을 등지려 하는 이들도.

지난달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이와 같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업주 대 정부와 여성단체라는 기이한 대결구도가 있다. 마치 정부와 여성단체가 한 편이 되어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업주들이 '공생'하고 있는 '생존권'이라는 조각배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언론은 모순적이게도 이들의 생존권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착취의 갈고리를 거머쥐려는 '업주'들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는 듯 하다. 노예선의 선장은 그 배를 결코 노예선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노예들에게 그 배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현혹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업주'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며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이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비밀의 세계'에게 살아왔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은 망망대해에서 뒤편내려야 하는 심정일 것이다. 이들이 자신을 착취하는 업주들과 한목소리로 투쟁하고 있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도 이러한 이유라고 풀이된다.

스웨덴은 지난 93년 이와 같은 법의 시행으로 탈성매매 성공을 60% 가까이 이뤄냈다. 이러한 성공을 이뤄내려면 먼저 정부는 '처벌'대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이 법을 홍보해야 한다.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 이 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단체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대책'을 꾸준히 시행해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을 구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포함해 일체의 전공노 주력 집회, 시위를 불허한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을 막고 나섰다. 그러더니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주동자와 참석자들을 전원 체증까지 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기관에도 통보, 징계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부터 노동3권 보장 등과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더니, 이제는 내부 행사를 문제삼아 불법운용하며 조직폭력배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지침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총파업투쟁 가시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 "정부의 강압과 탄압을 뛰어넘어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문화패 경연대회'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사수하자"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9일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열리는 '문화패 경연대회'는 전국 230여개 지부 중 '문화패'가 있는 18개 지역이 참여하는 행사이며, '간부결의대회'도 잇달아 진행된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입과 눈을 달으려는 시도는 7일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밝혀진, '전공노 활동전망·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10쪽짜리 문건에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동향부터 시작해, 노조의 집단행동 돌입 시 예상되는 파장뿐 아니라 정부·유관부처와 경찰의 대응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더욱이 스투표 가시화 시 주동자 사법조치 △상경 시 현지에서 현행법으로 체포 등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독재시절의 통치방식'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1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은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사 처음으로>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탄지

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측에게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를 가로막는 움직임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2003년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던 광둥의 한통련 상임고문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정식 여권을 발부받아 고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송세일 한통련 총장에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고 정세도 긴장하고 있는데 고국방문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특히 광 고문을 지목하며 "오랫동안 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고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당국이 있다"며, 이 같은 부담을 지고도 방문할 생각이냐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사카 영사관 측도 "광 고문은 상징적 인물이며 반드시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통련의 한 간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통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당국'이란 누구를 말하고 '부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따져물으며 이 같은 발언이 이 참사관 개인의 의견인지, 당국의 입장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75세의 고령 광 고문은 2003년 정부가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서를 입국조건으로 내걸어 고국방문이 좌절된 바 있다.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복을 주장해 온 광 고문은 "반성문은 미래 민주화 운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완강히 거절했다.<인권하루소식 2003년 8월 8일자 참조> 44년만의 고국방문에 대사관 측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것.

국내에서 이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한통련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의 김건수 사무국장은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은 "그런 일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대해 송 총장은 "이번 방문이 (해외민주인사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통련과 재일한국민주여성,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학생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고국방문단은 10일 한국에 도착해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에 머물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아?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느 순간 이적표현물이 되어 빨갱이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틀조차 적지 못하는 한 작가가 그린 그림 '진짜 빨갱이'가 벽에 걸려 있다. 그림에는 '단지 빨간색일 뿐'인 한 사내가 잔뜩 움크린 채 두려움 가득한 눈만 껌벅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미술인 연대'(아래 범미술인 연대)가 준비한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이 지난 4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범미술인 연대는 "그림 한 장, 시 한 편이 국가안위를 위협한다고 믿는 저 아만의 심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작가의 무의식에까지 침투해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악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인 이진우, 신학철 씨 등과 같은 미술인뿐만 아니라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미술인들이 세대를 넘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마음을 미술작품에 담았다.

미술인 안성금 실행위원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 활동은 오히려 잠잠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예술은 사회 현실과 떨어져있을 수 없다"며 "국보법은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시회에는 '이웃집에 온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앞서가는 저 등산객 간첩인가 다시 보자!'와 같은 반공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손님'과 '등산객'마저 간첩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의 논리'가 얼마나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짓눌러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는 11일 범미술인 연대는 전시된 작품들을 모아 정당과 입법부에 전달,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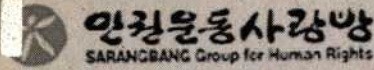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04년 10월 10일(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12일 (화)

제 26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2.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맞 좀 보라!
3.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4. 주간인권총론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타고 가는 버스나 열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다든지, 식당에서 밥이 다 떨어져 팔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1일, '문둥병'이나 '나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 2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원회관 사회의실에서 그동안 이들이 겪어온 차별과 편견에 대한 한맺힌 절규가 터져나왔다.

"부모가 한센병이라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을 고아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완치된 후에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센병력자들은 물론 가족들이 경협해야 했던 고통은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들로 가득했다.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한센병인권보고대회에서는 한센병을 둘러싼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가톨릭대 채규택 의과대학 교수는 "한센병이란 전염성이 아주 약한 병이며,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의 균이 죽어 전염성이 없어져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한센병력자들이 격리와 배척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가의 격리 정책에서 비롯됐다. 식민지 시절인 1916년 일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독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정부로 이어졌다. 폐지 후에도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자립 정착촌'을 권장, 이는 사실상 소독도를 육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다. 현재 87개에 달하는 정착촌은 또 다른 사회 격리로 일반인들에게 '한센병이 전염성이 강해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유지시켜 왔다.

이에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위원회 박찬운 변호사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한센병과거사 특별기구'는 물론 특별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소독도 84인 학살사건(한센병 환자 84인이 죽임을 당함), 비토리 사건(비토리 주민들이 한센병 환자들 천막에 불을 질러 26명이 죽고 70여명이 다침), 오마도 간척지 갇살 사건(한센인들을 시켜 바다를 막은 다음 정부가 보상도 하지 않고 쫓아냄) 등 진상조사는 물론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사건들이 무수하다.

이 외에도 소독도병원운영규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병원은 소독도에 거주하는 한센병력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병력자 포함)의 면회, 외출, 외박 등과 관련,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 의해 강제 격리된 한센병력자 111인에 대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한센병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보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황국신민화 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라...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竭忠盡誠)을 다할 것...국방상 완전히 신민(臣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38년 일제가 조선 청년을 침략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육군 특별지원병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다.

'친일인상규명법'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을 포함한 시민 1242명이 추진위원으로 등록된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1일 민간법정 현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추진위는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 등의 정신을 계승해 참언론의 지표를 제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현장 채택의 의의를 밝혔다.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현장'(아래 민간법정 현장)은 "뒤물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선일보> 민간법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민간법정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 보장' 항목이다. 이 항목은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규정. <조선일보>와의 합리적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추진위가 기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조선일보는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어?>라는 소책자를 발간,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기 때문에 안티조선 운동의 원조가 조선총독부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부정하거나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무마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간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덕우 변호사가 판사로 내정되었고, 배심원단은 각계각층의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 당시 민간법정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조선일보에 유죄를 선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개발을 명분으로 한 정부와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제 완화, 토지수용권 기업부여, 병원 영리법인화 등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기업도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재계는 '개발 이윤의 추구'와 '발전'을 동일시하며 개발을 독점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발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현혹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업의 뱃살을 찌우고 민중의 허리를 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이 개발의 객체로 전락한 가운데,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은 개발을 추진했던 기업의 재산으로 고스란히 전파됐던 것이다.

개발에 대한 국가와 재계의 독점→민중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부재→개발의 부작용에 대한 무책임과 민중 투쟁의 억압→개발 이익의 사(기업)적 재산화→피해의 민중 전가 및 민중 생존권 악화. 이러한 개발 구조로 인해 민중 중심의 발전 과정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권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유엔은 1986년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인간은 발전 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발전은 단지 개발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개인과 집단은 스스로 발전의 대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발전의 과정에 모든 개인과 집단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발전의 권리를 저해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의 결정과정에서 민중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발전권에 대한 침해다. 우리는 이미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서, 천성산 터널 반대 투쟁에서, 그

리고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에서 발전권 침해에 대한 민중들의 단호함을 목격했다. 발전권을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또한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정부와 재계는 깨달아야 한다.

◎ 범용 님은 인본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1. 성매매방지법은 무죄,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 대책 시급

성매매 피해여성 박모 씨 생계 비판 자살 시도(10.2)/ 강원, 인천 등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 잇달아 생계 비판 자살 시도(10.8)/ 성매매 피해여성생 첫 행사 입건(10.4)/ 전남,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들 줄줄이 구속, 성구매자들 불구속 입건/ 부산, 성매매 업주와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단속 항의 및 생존권 보장 시위(10.5)/ 성매매 피해여성 2천여 명,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10.7)/ 평택, 성매매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 반대 시위(10.11)/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에 38억 원 투입키로" 밝혀(10.6)/ 8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촉구(10.7)

2. '북 인권법' =북한붕괴 시나리오법

미국 상원 '북 인권법' 제상정해 통과(10.4)/ 북 외무성, '북 인권법' 통과를 '대(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외교통상부와 통일외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장, 반면 한나라당 '북 인권 문제 적극 개입' 주문(10.5)

3. 국보법 폐지, 이유있는 '찬성' -공허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개최(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 '국보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개최... "형법으로도 국보법 대체 가능" 주장(10.7)/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전국 작가 대회 개최(10.9)

4. 노동계 한목소리로 "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개최(10.7)/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집단농성 74일(위원장 단식 38일)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 타결(10.8)/ 양대노총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규탄, 연대 총파업 결의(10.10)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13일 (수)
제 26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2.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3.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4.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완 입법안을 반대했다.

네 개의 안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입법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안전보장특별법'으로 발표된 이 법은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내란죄' 개정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은 "(이러한 목적으로)폭동하는 것"으로 규정, '폭동'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폭동'을 삭제함으로써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민변은 "폭동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의 다른 내란죄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죄 부분 개정안에서는 '적국'이라는 전시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변은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으로 수정하여 북한만을 예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의 '적국' 개념 오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두 안의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네 가지 보완안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전국 각 부문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및 비상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먼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나는 올해로 '예비역 2년차'가 됐다. 군대는 2년 2개월 동안 누가 될지도 모를 '적'을 향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적대심을 나에게 철저히 주입하려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빛진 마음이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에는 이미 '적'도, '총'도 없다. 다만 방향 잃은 '의무' 혹은 '벌금'만 있을 뿐.

고작 2년밖에 안되긴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기억에는 군대 특유의 '답답함'과 '지루함'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보수 우익 이데올로기의 집단적 재생산.

"정치권에 있는 386세대라는 작자들, 전부 다 착한 국민들 꼬드겨서 '민중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작자들입니다." 반쯤 감겨 있던 눈이 번쩍 뜨였다. 적의로 가득 찬 그의 투박한 말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비군 동대장'인 그는 예비군 훈련에 꾸역꾸역 모여든 예비군들을 향해 굳이 '최고의 애국자'라 칭하며, '북한과 더불어 운동권 출신 정치하는 놈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을 주입하고자 했다. 끊지 않았던 그의 '정신교육' 시간엔 '북한'도 몇 번 나왔고, '주사파'라는 말도 나왔다. '공산정권'이라는 말도 나온 듯 싶다. 그 역시 '적'을 향한 총을 내려놓고 '예비역'이 될 지 죽히 몇 년은 되어 보였지만, 더 이상 외부로 향하지 않은 그의 적대감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섬뜩했다.

모두가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예비역들은 예비군 훈련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문화에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들은 사병과 부사관으로 나뉘었고 또다시 육군과 해병대로 나뉘었다.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입영 시기에 따른 서열관계가 형성됐다. 이제 어떤 이는 일반적으로 말을 '까고' 명령을 하고, 다른 이는 존대를 하고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됐다. 대학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마친 선배들은 술자리에서 후배들을 불러다가 '술을 세우곤' 했다. 여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우리 안의 군사주의는 그렇게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었다.

예비군 훈련을 통한 예비역들의 '전투력'은 항상 그런 식으로만 강화될 뿐이었다. 군사주의를 통해서 스스로 더 강하다거나 우월하다고 믿는 그들만의 신화. 마침, 지난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친 극우세력 중 상당수가 군복을 입은 늙은 '예비역'들이었음이 떠올랐다.

<기사 처음으로>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엘지정유의 '노조 죽이기' 시도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등 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엘지정유노조인권실태공동조사단(아래 공동조사단)은 9월초부터 약 한달 동안 만나온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들 토대로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아래 보고서)를 작성했다.

엘지정유노조는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 동안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의 사회적 의제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의 '선 복귀 후 대화' 요구를 수용, 현장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하루소식 2004년 8월 11일자 참조>

그러나 사측은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걸 가로막고, 일명 '복귀 프로그램'을 가동해 본격적인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복귀선언 이후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개별면담과 집단 교육 실시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노동기본권은 물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침해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인정, 이를 반성한다는 점과 향후에 사측의 지시사항과 인사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공동조사단은 서약서에 대해 "노동3권 포기각서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복귀한 모든 노조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서약서 강요에 이어 사측은 '경위서'에 파업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 이외의 타 노조원의 활동 내용까지 기술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개별 면담을 가져 파업의 정당성이나 향후 조합 활동 여부를 물으며 사측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면담을 중단하기도 했다.

심지어 "노조원들과 만나지 말고 절대 대기할 것을 강요하며, 유선으로 통화하여 집에 없을 경우 복귀 신청 자체를 원천 무효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 집단 교육을 받고 나서야 노조원들은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일할 장소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업무가 아닌 현장 청소, 펌프 닦기 등을 해야 했다.

이에 대해 공동조사단의 책임을 맡았던 최완욱 씨는 "사측의 복귀 프로그램은 노조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과 파업에 대한 심한 회의감이나 심리적 항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사측은 '선 복귀 후 대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노조원의 조합사무실 출입마저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30여억 원에 이르는 손해가압류 신청이 광주지검에 의해 받아들여져,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게 비판받았다.

최 씨는 노조 죽이기를 적극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엘지정유의 사례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사측의 노동자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을 하기 위해 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두 명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이 씨와 캐롤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각각 퇴직금 320만 원을 '도저히 줄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귀국을 앞두고 수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사업주와 만나기 위해 7일 노동사무소에 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동사무소 우경화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들을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화성보호소로 연행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점수 근로감독관조차도 "규정상 감독관이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긴 하나 인권 문제도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의아해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김우형 사무국장은 "노동사무소의 이번 대응은 체류 기한을 넘긴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꼴"이라며 노동사무소 규정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에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한이 지났다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수원 노동사무소에 전달했다.

한편 11일에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고옥봉 씨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고 씨는 체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14일 (목)

제 26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2. 국보법이 낡느냐, 내가 낡느냐
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4.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일반 전화개통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를 실시했다.<하루소식 2004년 7월 8일자 참조>

당시 안아무개 씨도 명예퇴직을 거부해 서광주에서 나주지점 상품판매팀으로 업무지역이 바뀌었고,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회사직원을 발견한 것. 안 씨는 사측이 자신을 오랫동안 감시, 미행해온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화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복무점검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는 감시활동이라고 느꼈고 그에 따른 우울증과 두통 증세 등을 보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6일에도 안 씨와 같은 이유로 박아무개 씨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상품판매팀으로 발령을 받았던 박 씨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측의 감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산재판정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회사가 퇴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탄압을 해왔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KT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는 박 씨가 산재요양신청을 한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통보'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감찰활동은 정당한 행위로 박 씨의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재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사실확인'란의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박 씨의 산재요양신청 승인과 관련해 '적반하장'격으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상대로 '산재요양신청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활동가는 "ILO는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노동감시 규제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국가보안법을 소재로 한 이색 퀴즈대회가 열린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24일 한성여중 강당에서 열리는 "도전! 골든벨, 폐지! 국가보안법" 행사가 그것.

특별히 이 행사는 13~18세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유, 평화,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퀴즈대회에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자원활동가 전경주 씨는 "현재 많은 청소년 당원들이 서명운동과 선언식 등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를 말하는 교과서와 국가보안법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번 골든벨 행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허구성을 밝혀보고 싶다"고 이번 행사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좀 더 대중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에서 준비됐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50개의 문제를 풀어 골든벨을 울리는 주인공에게는 2박 3일의 금강산 여행권(2인)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참가비는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의미하는 5600원이다. 참가 신청은 <오마이뉴스>와 행사 홈페이지 (<http://freedom.jinbo.net>)로 하면 된다.

문의:02-744-4571(교육문화공간 향)

<기사 처음으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입법안'(아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 13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김희수 씨는 "100년에 걸친 역사적 숙제를 푸는데, 1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늬만 과거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일제 시대에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이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그리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김동춘 상임집행위원장은 "군의 문사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사범위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 항일독립운동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과거청산은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우당은 위원회가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의 소명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의문사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의 자료 열람권은 100% 보장하고, 국가안전의 문제가 있을 경우 공개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불응, 조사 기피, 동행명령 거부, 검증 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전 상임위원은 "조사 시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 정도로 누가 조사에 응하겠나"며 "위원회에 권한도 주지 않은 채 조사를 하라는 것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위원회(준)는 "가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은폐해 왔던 일들에 대해 처벌받을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정지'를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이 예상된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대표자 50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단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찬·반 진영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공식적 폐지 입장에 대해 환영하지만 "보안 입법안들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형법만으로도 "국가 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연대는 지난 4일 대규모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 등 최근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의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12일 열린우리당이 폐지 당론을 확실히 하자 한나라당은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도 끝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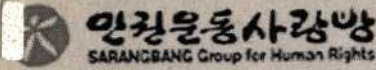
한편,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13일 각 당 사무총장에게 "이번 국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칸 총장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일상, 숨쉬는 공기까지도 억압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영상, 음악, 퍼포먼스 등의 문화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에서 오후 5시부터 문화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15일 (금)

제 26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회사 비리 고발한 노동자에 '해고' 칼바람
2.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3.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4. <기자의 눈> 되풀이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한가

회사 비리 고발한 노동자에 '해고' 칼바람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인 성일기업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다. 다음날, 이들 중 9명에게 회사로부터 '해고장'이 날아들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31일 모두 해고됐다.

이들에 따르면, 안양시 청소대행업체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명목으로 시 예산을 횡령해 왔다. 안양시가 2003년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내 생활쓰레기 청소를 위해 대행료로 130억여 원을 지급했고 이 중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103억여 원을 지급했다. 2003년 환경미화원이 256명이므로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4천만원 정도가 지급된 셈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안양시 환경미화원 임금은 많아야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청소대행업체들이 임금을 횡령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2003년 임금대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명단 중 10명이 허위 등록자임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대행업체인 성일기업(주) 대표이사 딸을 사원으로 등록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 년 동안 월급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 문제에 안양시도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안양시가 법률이나 조례를 어기고 △청소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경계적으로 청소업체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안양시 청소과 송승규 팀장은 "시와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가 한 주제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은 "이런 문제는 안산, 부천,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도 밝혀진 고질적인 문제"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체 시 직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인 최봉현 씨는 "이번 일이 잘 해결돼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을 포함 11명의 노동자들과 4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안양시청 앞에서 10여 일 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글쓴이: 김형욱 외/ 펴낸곳: 한국청소년개발원/ 369쪽/ 2004년 9월

국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청소년인권백서가 발간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인권백서'의 주기적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로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소년 인권의 모든 것을 한 권의 백서로 세상에 내었다.

이 자료집은 여타의 인권백서와 확연한 차별성을 가진다. 단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진단과 해석은 물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대개의 종합백서들이 인권현안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지만, 청소년 인권백서에는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기준으로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변화까지 추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크게 △기초보전과 복지에 관한 권리 △가정환경과 양육에 관한 권리 △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사회적 약자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인권 실태와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2003년~2004년 10대 청소년인권 이슈인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청소년 노동권, 표현의 자유, 학교교직, 0교시 및 강제보충수업 감시, 빈곤가정 청소년, 네이스 반대운동' 등을 선정하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권리의 주변부에 있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백서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 할 존재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또한 이 백서를 통해 일과 여가로부터 분리되어 모든 것을 유보 당한 채 '학업'에만 열중해야 했던 청소년이 이제는 생산적 노동에 참여하고 사회·문화·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처음으로>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노동부가 과도한 심사절차 도입 등 산재인정 기준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고 해 산재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아래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섯 단계의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 후 추가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 결정 △질병별로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의사, 노무사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리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개정하려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은 산재요양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복귀'라는 산재요양치료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김은기 간사는 "지금의 간소한 승인 기준으로도 3개월씩이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더 복잡한 기준을 도입하면 승인까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승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제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처리지침의 '질병에 따른 획일적 요양기간 설정'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 간사는 "심지어 나이에 따라서도 치료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요양기간을 획일화하려는 것은 상한선을 낮게 잡아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 박탈시키려는 것"이라 꼬집었다.

노동부의 이와 같은 처리지침은 노동자의 '산재요양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작성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경수 교육실장은 "노동부뿐 아니라 경총이 산재요양 장기화의 책임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로 엉뚱하게 돌리며, 생산의 과정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산재요양이 길어지는 것은 재활·운동 치료와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질환과는 달리 근골격계 질환이 오랜 시간 반복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생긴 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처리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항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되풀이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한가

달랠 길 없는 유가족들의 분노... "과거청산에 포함시켜야"

경기도 포천시 주둔 보병제6군단은 술한 군의문사 사건을 양산해 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높던 14일, 완만하게 굴곡진 푸른 산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군의문사 유가족 한 명이 땅바닥을 뒹굴며 목을 놓아 통곡을 한다. 검은 양복 차림의 몇몇 군 관계자들은 뺨뺨이 선 채로 그녀를 내려보고, 정문 앞에 놓인 '정지(STOP)' 표시판은 그녀를 가로막고 있다.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 등 3개의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유가족 20여명은 "군대에서 죽으면 수사도 하기 전에 무조건 자살이나"고 외치며 다시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90년 군의문사로 아들을 잃은 군가협 윤옥순 회장(고 흥안표 씨 유가족)은 "군은 왜 사건만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나"며 울분을 토했다. 아들이 군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지 20일 뒤, 윤 회장의 남편은 병을 얻어 2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아들의 뒤를 쫓았다.

서영진 씨(고 서유성 씨 유가족)는 "군은 군내에서 자살로 판명된 사건의 원인을 무조건 개인의 이력으로 돌리려 하는데, 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군에 가서 죽었냐"며,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책임전가에 급급한 군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 씨는 심지어 "최근 한 공군이 사망하자, 해당 부대의 대령이 부모를 앞에 두고 '이 아이는 원래 죽을 아이였는데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수준"이라며 기가 막혀했다.

이들은 의문사를 자살로 포장하는 것뿐 아니라 설령 군의문사가 자살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군 내부의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잔재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체력이나 적응 속도가 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개인편차를 인정하지 않고 왜 한 가지 기준만을 제시하나"며 고질적인 군 문화의 폐해를 비판했다.

사망현장과 증거품의 훼손변형, 허위증언 종용 등 은폐조작 일색인 군의문사 사건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풀릴 길 없는 울분과 통한의 심정을 붙들며 매고 유가족들은 군수사체제 개선과 과거청산의 하나로 진상규명을 주장해왔지만, 정치권은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아래 입법안)은 군의문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했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외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동병의 편지'가 흘러나왔고, 정문 앞 중앙에서는 목을 맨 군인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목을 축 늘어뜨린 군복 너머에는 소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아른거렸다. 그들의 호느낌은 이처럼 현재 진행형이다.

이후 군가협 등 유가족들은 한나라당 옛 당사 앞에서 입법안에 군의문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